

2017. 05. 31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 전략 탐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

■ 토론회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 전략을
탐색한다.

주관:  **교육을 사랑하는 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시: 2017. 05. 31. (수) 오후 2시 00분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 전략을 탐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월 31일(2시)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 전략을 탐색한다.”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곧 교육부 장관 및 청와대 교육 비서관 임명 등의 인선과정이 예정되어 있고, 또 후보시절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실행해야할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영역의 공약들보다 특히 교육공약은 쟁점이 많고, 온 국민들이 이해당사자이고, 교육학적으로 올바른 공약이라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는 그것보다 이해당사자 혹은 국민들의 당장의 급한 필요나 관심사로 묻히거나 혹은 공격을 받아 좋은 공약이 흔들릴 소지가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와 다른 영역에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을지라도, 교육 영역에서는 국민들 간 입장 차이가 커서 자칫 국정의 동력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약 하나하나를 현실 속에서 작동 가능한 구체적 정책으로 제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공약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고, 영킨 실타래 중 어느 것을 먼저 풀어야하는지가 또한 간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공약들의 연계와 이행의 우선순위, 그리고 여러 갈등적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하고 지혜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형국을 보니,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만 할 일은 아닙니다. 정부 측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나름 길을 찾겠습니다만, 익숙한 길만 선택해서는 안 되며, 지난 시절의 이해 당사자들의 공격과 대항으로 개혁 정책이 좌초된 경험을 생각할 때, 시민적 참여를 통해 더 새로운 통찰과 지혜가 첨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교육부와 교육청, 정당과 청와대의 역할, 권한의 균형과 분배 및 협력의 문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당장은 책임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겠지만, 1)장관 취임 후 국가교육회의 구성 이전 초 단기적 단계의 과제(2021학년도 수능 개편, 고교체제 개편 등), 2)국가교육회의 구성 이후 중단기적 과제, 3)국가교육회의를 넘어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후 중장기 의제, 4)교육 개혁 추진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새로운 협력 방식 등으로 나누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실현하는 시간표를 정리한 후, 그 맥락 속에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 정부에 제시하고 민간은 또 그에 걸맞은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단체는 긴급 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에 발제자로 8명을 모시고자 하는데, 이분들은 교육현장 혹은 교육행정 영역에서 정책 개발과 추진의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전체를 보고 합리적이면서도 개혁적 방향의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와 관련된 제언을 하고 나아가 민간 영역에서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참여 운동의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 05. 3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목 차

발 제

- 제 1 발제: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 1
“새 정부 교육공을 정책화 하기 위한 몇가지 고민& 사교육 고통 ZERO: 새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 전략 탐색”

- 제 2 발제: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13
“문재인 정부 교육 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 제 3 발제: 이성대(신안산대학교 교수) 29

- 제 4 발제: 최창의(행복한 미래 교육포럼 대표) 31
“초기 교육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과제와 방향”

- 제 5 발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45

- 제 6 발제: 한만중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47
“문재인 정부교육공약 추진 전략 방안”

- 제 7 발제: 이 범 (교육 평론가) 51

- 제 8 발제: 이기정 (미양고 교사) 53
“문재인 정부교육공약 고찰”

- ※ 참고사항: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교육공약 61

■ 제1발제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을 정책화하기 위한 몇 가지 고민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7. 5. 31.)

1. 개별 공약을 정책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책 내용에 대해 개혁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아내야한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 체제 공약’의 경우,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화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그 수단으로 선발 시기 일원화만 제시하고 있는 바’, 제시된 공약 내용간의 논리성이 떨어짐. 이것을 그대로 정책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목표한 내용에 맞는 방법과 수단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해야함. 정부 차원에서 준비도 해야 하겠지만, 민간 영역에서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일이 필요.

2. 공약의 이행 순서와 관련된 고민.

1)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들을 추진하는 순서와 관련된 문제. 어떤 공약은 다른 공약이 추진되면 큰 무리 없이 뒤따라 올 것들이 있다. 물론 큰 무리 없이 뒤따라 올 공약들은 국민적 저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먼저 추진하면서, 힘겨운 주제들은 뒤에서 논의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미루고 싶은 갈등적 주제일지라도 미룰 수 없이 마감의 압박을 받을 경우도 있다. 즉, 공약의 추진 과정에서 ▲공약의 논리적 선후 관련성 문제에 대한 점검(외고/자사고/국제고 등의 일반고화 vs 고교 학점제, 수능 절대평가 vs 고교 내신 절대평가 등) ▲새 정부가 힘이 있을 때 밀어붙여야 할 부분들과 완급조절을 해야 할 부분, ▲갈등적 주제일지라도 시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관련)에 대한 해법 등이 얹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조망을 한 후 민간 영역에서 공약 추진의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먼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리 단체의 경우(잠정적 일정)

□ 1단계 과제 -2017년 상반기

-2021학년도 수능 관련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화시키는 정책 등(자사고 중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학원 휴일 휴무제/ 선행교육규제법 등 나쁜 사교육 근절 대책

□ 2단계 과제 - 2017 하반기

-대학입시전형 간소화(논술 및 특기자 전형 폐지+ 비교과 전형 간소화 등) / 구분창

-영유아 인권법

-내신평가제도(학점제 및 절대평가 등)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화시키는 정책 등(외고, 국제고 중심)

-국가교육회의 구성 및 의제

-교장공모제 확대

□ 3단계 과제 -2018년 상반기

-대학체제 개선(대학입학보장제)

-직업 간 임금격차 해소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및 의제

2)시민적 갈등 사안에 대한 또 다른 해법

-자사고 외고 등의 일반고화,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의 경우, 갈등적 사안임. 이와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이 다각화되어 있고, 특히 시민들 가운데 찬반이 갈리고 어떤 경우는 공교육 정상화에 이로우나 형식적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반발(수능 수시 확대 등)도 있음. 또한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화에 대해서 해당 학교 학부모들 등의

반발은 상상을 넘는 수준으로 격화될 것이고, 그 반발을 정부나 교육청이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 취약한 구조임.

-이런 반발에 대해서 민간 영역에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 숫자와 영향력에 있어서 미미했고, 이런 대중적 반발에 있어서 힘의 불균형 상태는 지속되어 왔음. 이런 상태에서 정부나 교육청이 중심을 잡고 이와 관련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교육계에서의 노사정 원탁회의? 등)도 별도로 고려해야 할 것임.

3. 거버넌스의 경우

이런 공약 이행 과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역할 문제,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대책,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부의 역할 분담, 교육부의 개혁에 대한 전략 등에 대한 논의.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 전략을 탐색한다.

“사교육 고통 ZERO : 새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 전략 탐색”

서울 주요 대학이 요구하는 변별력과 고교학점제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

-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공약 중에서 사교육 유발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외고/자사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대입제도 개선(대입전형 단순화, 수능 절대평가 도입 및 자격고사화 검토 등), 국립대학 연합네트워크, 학력/출신학교 금지법 등에 대해 평가 및 보완사항을 살펴보고, 실행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제안하고자 함.

1. 외고/자사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 (공약 내용)

- 외고/자사고/국제고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함. 과학고는 유지.
1차 특성화고 → 2차 일반고·자사고·특목고 → 3차 1·2차 탈락자 대상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전형을 우선 도입하여 고교입시로 인한 초·중학교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할 것임. 즉, 현재 자사고, 특목고에 부여된 학생우선선발권을 없애고, 동시선발을 통해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임.

■ (평가 및 보완사항)

- -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고 선발시기를 일원화하는 것만으로는 일반고 전환의 효과를 갖기 어려움. 따라서 선발시기와 함께 ‘선 지원-후 추첨 선발’ 및 일반고에 비해

‘비싼’ 등록금 문제 해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 과학고에 대한 개선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임. 과학고 관련해서는 과학고와 영재고를 위탁교육 기관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던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고교체제 개선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고교체제 개선을 평준화로 이해하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국민들 사이에 여전히 폭넓게 존재하며 기존 외고/자사고/국제고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 또한 격렬한 것임.
- 이를 설득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고 교육과정 안에서도 학생의 학력 수준 차이가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함. 그런 의미에서 고교학점제는 대안이 될 수 있음.

2. 고교학점제 도입

■ (공약 내용)

-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함. 평가 방식은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교사별 평가와 절대평가를 추진함.
- 다만 고교 학생부 내신이 대학입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지 않는다면 대학이 학교내신을 불신하면서 대학별 본고사를 부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의 신뢰성 확보 연구를 통해 대안을 찾은 후에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임.

■ (평가 및 보완사항)

- 고교학점제 도입은 서열화된 고교체제 단순화의 대안, 영포자/수포자 문제 해결, 학생의 선택권 확대와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수업과 평가 방식의 변화, 초등학교/중학교

교육의 변화 유도 등 우리 교육의 근본적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절대평가의 대학 입시 변별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여기서 ‘대학입시 변별력 확보’란 정확하게는 서울의 주요 몇 개 대학의 변별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정성평가조차도 결국에는 점수화하여 촘촘하게 학생을 선별하는 방식)의 변별력을 인정한다면 고교학점제는 매우 부분적으로 시행되거나, 무리하게 확대 시행된다면 입시에 종속되어 그 내용이 왜곡되고 새로운 입시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결론적으로 고교학점제와 이에 따른 교사별 평가 및 절대평가의 도입은 서울 주요 몇 개 대학의 대학서열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촘촘한 변별력 요구와 양립할 수 없음. 즉, 고교학점제와 변별력 요구 충족은 연구를 통해 ‘묘안’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선택의 문제임.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학서열의 상위에 있는 몇 개 대학이 촘촘한 변별력을 ‘양보’해야 함.
- 양보의 방식은 우리 단체가 주장한 대학입학보장제를 비롯해서 주요 대학 공동선발 등 최근 사회적으로 제안된 논의를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 정책 연구는 어떻게 하면 고교학점제와 함께 시행되는 절대평가가 주요 대학이 요구하는 변별력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갖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시행되어야 하며, 대학입시는 그 기준을 충족하면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3. 대입제도 개선(대입전형 단순화, 수능 절대평가 도입 및 자격고사화 검토 등)

■ (공약 내용)

- 고교서열화 해소 및 학점제/무학년제 교육과정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결

과를 반영하는 대학입시,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혁신에 기여하는 대학입시제도 개혁을 추진함.

- 대학입시는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수능 전형 3가지로 단순화함.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내신만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로만, 수능전형은 수능만으로 선발토록 할 것임.
-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요소는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함. 논술전형, 특기자전형은 폐지하며, 학생부종합전형에 비교과영역 또한 축소함. 구체적으로 소논문, 에세이,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도 꼭 필요한 경우(기회균등전형, 사범대학의 면접)가 아닌 경우에는 폐지할 것임.
-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에 대해서는 수능 절대평가를 계획. 장기적으로 수능자격고사화 입장이며, 당장 올해 여름에 발표할 2021학년도 수능은 절대평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평가 및 보완사항)

- 대학입시와 관련된 단기 개선책은 상당히 적절하며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됨. 사교육 유발요소가 크고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폐지하는 것과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개선책은 매우 적절한 조치임. 특히 최근 주요 대학이 논술전형을 축소하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지식을 묻는 본고사 형태의 면접(서울대 일반전형 방식)을 늘리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면접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규제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공약에서 밝히고 있는 바처럼 고교서열화 해소 및 학점제/무학년제 교육과정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결과를 반영하는 대학입시,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혁신에 기여하는 대학입시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현행 대입제도의 패러다임을 ‘무한 경쟁과 촘촘한 선별에 의한 선발’에서 ‘자격기준 충족과 입학보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 이는 대입 관련 제도와 정책 변화 이전에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철학과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그렇지 않는다면 고교학점제와 수능 자격고사화 등 대학입시 개선안 모두 ‘변별력’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음.

- 다만 눈앞에 다가온 2021 수능개선안은 절대평가의 취지는 살리되,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당장 정시 선발이 불가능해지는 현실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함. 예를 들면, 정시의 경우 절대평가를 실시하면서, 동점자 처리 등에 한하여 점수(표준점수, 원점수, 백분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자격고사 전환 등은 지금과 같이 촘촘한 변별력과 그것에 기초하여 유지되는 대학(학과) 서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정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그럴 경우,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시작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수시/정시 비율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면 됨. 어떤 대학은 정시의 비중을 늘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대학은 수시를 현재보다 더욱 확대할 수도 있는 것임.

4. 국립대학 연합네트워크

■ (공약 내용)

- 대학서열화 해소 방안은 교육노동산업 등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가 함께 제시되어야 함.
- 1단계로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대학상생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학의 대표 및 구성원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며, 지역 거점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국립대학 연합 네트워크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 것임. 2단계로 국립대학 연합체계 구축을 시작하고, 공동선발-공동학위 수여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며,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육성도 2단계에서 시작함. 또한 대학 중심의 지역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인재가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아가 공공기관 등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추진할 것임. 3단계로, 공영형 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과 이미 구축된 국립대학 연합네트워크의 연계협력을 시작하고, 더 넓은 형태의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함.
- 국립대학간 교수학점 교류 및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며, 국공립대학간 기능별(연구중심·교육중심·직업중심 등), 중점 분야별로 특화함. 이와 같은 기반을 구축해

나가면서 국공립대학 공동운영체제(네트워크) 협약 추진으로 자발적 고등교육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내 공동선발과 공동학위 수여를 추진함.

■ (평가 및 보완사항)

- 국립대학 연합네트워크의 구축은 집중 육성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기능별/중점 분야별 특화를 위해서는 국공립대학 간의 공동 구조개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또한 기능별/중점 분야별 특화를 위한 국공립대학 간의 공동 구조개혁은 지역 거점국립대학만이 아니라 지역의 다른 국립대학(가능하면,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의 대상이 되는 사립대학까지)이 참여할 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즉, 1단계와 2단계로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국립대학 연합네트워크 체제 구축은 단기 과제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충분한 협의와 준비를 거쳐 시행되어야 함.

5.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 (공약 내용)

- 학력·출신학교에 따라 입시와 취업 등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재란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력·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임.
- 지방대출신 채용할당제를 강화해,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30% 이상 채용할당 준수를 법률적으로 강제할 계획임.

■ (평가 및 보완사항)

-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라 입시와 취업 등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한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을 확실히 약속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 전략을 탐색한다.

■ 제2발제

문재인 정부 교육 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

- 수능절대평가와 내신절대평가가 맞물리면서 수능절대평가를 상수화하고 내신절대평가는 변별력을 위해 살려두자는 식의 논의가 있으나 거꾸로 되어야 한다. 절대평가의 취지는 내신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목적에 비추어볼 때 수능 절대평가보다 내신 절대평가가 더 중요하다. 좁은 집단 내에서 동료와 상대적 비교 경쟁을 하는 것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의 성취라는 교육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변별력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패러다임의 선택을 해야 한다. 즉 상위권 대학이 요구하는 10% 이내 학생들에 대한 세밀한 변별을 맞추어주려고 할 것인가? 10% 학생들의 경우 굳이 더 세밀하게 변별하려고 하지 말고 면접이든(본고사형 면접 금지) 추천이든 느슨하게 선발해도 된다는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

- 수능절대평가의 의미는 1등급의 비율에 달린 것이다. 4%로 제한하는 1등급의 비율을 10% 정도까지 확대하면 1등급 수준의 학생들이 과잉 변별에 대비한 과잉 경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 완화에 도움이 된다. 물론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다. 나머지 학생들은 1등급에 들기 위한 경쟁에는 변함이 없다. 1등급 수준의 학생이라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이다. 절대기준 자체도 상대화될 수 있어 상향조정될 수 있다. 핵심은 이 정도면 더 이상 구분하지 않는다는 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정상적인 학생이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을 때 성취해야 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교육학적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그 수준을 달성한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학습량을 요구하는 과잉이 사라져야 수능절대평가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다.

- 그런데 이 논의와 맞물려 내신 상대평가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논리가 있다. 변별력 패러다임에서 보면 내신 수능 절대평가가 되면서 내신 상대평가를 유지하면 그 강도가 더 세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수능절대평가를 통해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가 상쇄되어 버린다. 어쩌면 더 가혹한 경쟁이 이루어진다. 내신 경쟁이 강화된다고 하여 학교교육이 정상화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스트레스만 올라갈 뿐이다. 절대평가의 취지를 살리려면 수능과 내신이 동시에 절대평가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 내신 절대평가로 갈 경우 특목고가 유리하게 된다는 반론이 있다.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별로 특목고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학생의 다양성이라는 기준을 평가 기준으로 넣어 대학지원금에 연계할 수 있다. 고교체제를 개혁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그것 때문에 상대평가를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덜 중요한 것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을 희생시키는 방식이다. 소수의 특목고생을 잡기(?) 위해 전체 학생들에게 상대평가 체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 그렇다면 절대평가체제로 가게 될 경우 부풀리기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준비도가 성숙되어 있지는 않다. 절대기준 마련과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절충적인 해법을 모색한다면 과도기적으로 내신상대평가를 완화하는 방법이 있다. 즉 9등급 체제로 1등급을 4%로 유지하는 체제를 완화하여 5등급 체제로 바꾸고 1등급을 20%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다. 물론 절대적인 평가를 적용하여 1등급이 20%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체제의 절충인 셈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부풀리기 논란은 어느 정도 피해질 수 있다. 변별력은 확보되는가? 여러 과목에서 1등급을 다 받는 경우의 비율은 20%보다 줄어들게 될 것이다. 여기에 만약 과목별 세부능력을 세분화하여 각각에 대해 평점을 부여하는 IB형 친절한 성적표 체제가 된다면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이 경우는 획일적인 줄 세우기가 아니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과목에서 논술 능력이 A등급인 학생으로 선발할 수도 있고, 협업적 능력이 A등급인 학생으로 선발할 수도 있다. 대학마다 선발의 기준이 다르므로 인해 여러 줄 세우기가 가능한 것이다. 지금도 대학마다 반영하는 과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 줄 세우기가 되고 있는 셈인데 제한적이고, 정지필고사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질적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세부적 능력에 대한 평점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하면 다양한 수행평가가 활성화될 것이다. 요컨대 이 경우에도 각 능력별 A등급의 비율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직관적으로 교사들이 평가할 수 있는 등급은 5등급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될 것이다. 그 이상을 요구하게 되면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평가로 인해 교사들의 평가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

- 요컨대 수능절대평가와 내신절대평가를 대비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가를 묻는다면 내신의 정상화에 더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만약 완전한 절대평가가 불가능한 구조라면(사회적 합의에 달린 것이겠지만) 느슨한 상대평가 즉 5등급 상대평가와 1등급 20% 이내라는 기준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 수능도 단기적으로는 절대평가 1등급의 비율을 10%~20%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가는 것도 적절할 것이다.

- 그렇게 되면 대입전형에서 내신과 수능과의 상대적 비중의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그 황금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내신의 상대평가가 완화되면 그 정도만큼 수능의 등급이 더 중시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내신의 완화된 상대평가를 지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수능의 등급이 중시된다고 할 때 수능 자체의 질을 개혁하는 것이 또 다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물론 이것과 무관하게 수능 자체의 질을 개혁하는 것은 중요하다. 객관식 평가의 한계를 벗어나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바칼로레아식 논술형 수능을 도입해야 한다. 그것은 수능의 개혁을 통한 학교 수업의 개혁이라는 과제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 큰 그림은 이렇게 잡아야 한다. 수능과 내신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수능은 지필평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내신은 일부는 수능에 대비한 것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수능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 발표력, 협업능력과 같이 수행평가를 통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역할 구분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2가지가 적절하게 조합되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물론 수능으로만 혹은 내신으로만 선발하는 전형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능+내신으로 선발하는 전형도 필요할 수 있다. 그것은 대학 자율에 맡겨도 좋을 것이다.

- 다시 돌아가서 변별력 논란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 수능과 내신으로 줄세우기가 되지 않는 상위 10% 정도의 학생이 나올 수 있다. 그 정도가 나와야 정상이고 효과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대처해야 한다. 고교교육의 정상화라는 대전제로 대응해야 한다. 그 논리로 본고사 주장도 원천 봉쇄해야 한다. 이미 충분한 수준에 도달한 학생에 대한 과잉변별을 중단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은 결국 상위 10% 수준의 대학 간의 서열화 해체와 연결되어야 한다. 굳이 학생들의 수준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

미한 선발 체제 속에서 학생들의 입학 성적으로 형성되던 서열화 체제는 해체되고 대신 대학 교육의 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굳이 대학입학보장제나 대학통합네트워크 등의 인위적 체제 개편이 없이도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둘러싸고 기득권 대학의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대학의 힘으로 서로를 견제하도록 하고, 고교와 교사집단은 상위권 대학의 요구에 맞춘 지나치게 세밀한 변별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 중학교 교사별 절대평가

- 이와 관련하여 사실상 이슈로부터는 조금 비껴 있지만 중학교의 교사별평가와 절대평가의 정착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차피 고등학교의 경우 선발체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가더라도 모든 학생의 성취라고 하는 교육 본질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로 중학교 단계부터 완전한 절대평가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과제가 있을 것인가? 중학교에서 정지필평가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상시평가체제가 될 것이고 교사별평가가 전면화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교선발체제를 정리해야 한다. 성적으로 선발하는 체제는 완전한 선지원 후추첨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특성화고의 경우에 성적순 선발을 용인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선지원후추첨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성적 산출을 둘러싼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중학교 성적은 선발의 수단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킨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내실화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 우선 절대평가의 목표 성취수준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너무나 오랜 동안 선발을 위한 성적 산출 체제에 익숙해지다보니 교육과정의 성취율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부터 새로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학 원론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이라면 정상적인 학생들이 충분히 성취가능한 목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90% 이상의 학생들이 성취수준으로 볼 때 A등급을 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면 부풀리기라는 의심을 받아야 했다. 물론 A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한 수준을 B로 설정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학생을 A로 표현하자고 약속한다면 A의 비율이 줄어들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의 성취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점을 받은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다음 학기로 학년으로 진급을 한다. 그렇다면 그 50점은 현재 학교교육과정이 목표로 하는 충분한 합격의 기준인가? 이 부분에 대한 교육학적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합격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보장제와 1수업 2교사제 등이 제시되었다.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지만 학부모 학생 교사 3자 면담 의무화와 개인별 교육계획 수립이라는 정책도 제시되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에 쏟아지는 무책임 교육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는 개인 맞춤형 교육을 내세웠는데 그것이 실현된다면 이것은 입시개혁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실 입시문제는 상위 10%의 이슈다. 그 학생 사이의 변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능을 중시할 것인가? 내신을 중시할 것인가?를 가지고 복잡한 퍼즐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일대일 맞춤형 교육은 전체 학생과 관련된 이슈다. 특히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다.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수능을 비록한 입시정책에 쏠린 관심보다 개인맞춤형 교육을 위한 체제 구축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의 슬로건과도 일치한다.
- 그 점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1수업 2교사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논평 참조)

○ 고교학점제

- 첫째, 고교학점제는 선택권의 확대라는 본질을 살려야 하는데 수학이 관건이다. 수학을 얼마나 선택영역으로 풀 것인가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사회나 과학의 경우는 선택과목의 확대보다는 과목 내 다양성 확보가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교사별평가를 우선해야 한다.
- 둘째,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교사들의 수급 문제 및 수업 부담이 될 것이다. 양 방향의 접근이 필요한데 강사 충원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존 교사들의 유연성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고로 한편으로는 교사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중요하다. 교사의 교과 전문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육성해야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일제식 강의를 탈피하여 학생의 배움을 도와주는 역할로서의 교사 전문성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교사가 자기 교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배움의 욕구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교사들의 증가하는 수업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업무정상화라는 과제도 결합할 필요가 있다.
- 그 외에도 유연한 시간표 운영, 교과교실, 사이버강의 활용, 지역과의 연결, 자유로운 교과 개설 등 많은 과제가 있다. 학생의 관심을 반영한 교육과정 선택권을 완전하게 실현하려면 대학 이상의 인프라가 필요할 수 있다. 고로 학점제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요구는 접고

우선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가능한 수준이라도 실현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워야 한다. 가장 일차적인 과제는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를 없애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수학 수업에 있어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하고 차츰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학생의 선택을 투명하게 받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제로 베이스에서 선택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좀 더 정교하게 설계하여 학교에 지침을 내려야 한다. 편의 위주로 학교 선택으로 정했던 부분을 바로 잡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

○ 고교 체제

-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목표는 제시하면서 정작 선발 방식을 선지원 후추첨제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의문이다. 전형 시기를 동시화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적순 선발이라는 이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즉 완전한 절대평가제 정착이라는 것이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간과하는 부분이 특성화고 선발체제다. 특성화고에 대한 선호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현실은 있지만 그래도 선호되는 특성화고도 적지 않고 이런 학교들이 성적순 선발을 유지하는 한 그것을 위한 성적 산출 체제는 여전히 작동할 것이다. 고로 특성화고, 자사고, 외고 모두 선지원 후추첨제로 가야 한다.

- 그리고 만약 선발 방식만 정리하면 굳이 외고나 자사고를 일반고로 인위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정리되거나 그대로 있어도 무방하다.

- 만약 과학고나 영재고를 유지하기로 한다면 그 학교의 선발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획일적 성적이 아니라 학교장 추천 전형 정도로 만들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관찰이나 면접 등 다른 방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자치

- 국가교육위원회 구조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계의 합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 논의 자체가 가장 어려운 합의 대상일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우선 자문기구 형태로 만들어질 것인데 과거의 경험을 볼 때 위원회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구조는 이런 것이다. 쟁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쟁점에 대해 찬반 입장이 있다면 각각 대변하는 2인을 넣고, 중립적인 입장의 인사를 3명을 넣은 다음 7인 소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한을 주고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로의 대안을 1안, 2안으로 제시하여 중립적 인사로 하여금 최종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건은 중립적 인사가 누구인지에 달려 있을 것인데 상호 배척하지 않는 인사로 구성하면 성립될 것이다. 이런 위원회가 쟁점별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거기서 나온 합의안이나 다수안을 토대로 결정하도록 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회 구조를 보면 많은 사람을 위원으로 모아놓고 비용과 시간만 많이 들고 생산성 있는 결론을 끌어내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구성 자체가 편향적이라는 시비에 말려 정당성을 확보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원포인트 쟁점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위원회가 다수 구성되는 것이 낫다.

- 교육자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 없다.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감에게 권한을 이양한다는 큰 그림만 있는 정도다.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중앙정부 단위에서 행사해야 하고, 어떤 것은 교육청, 학교 단위로 넘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방대한 토론을 필요로 한다.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우선 시급하고 검증된 것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 초점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에 두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교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통일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역으로 찾아야 한다.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교육청의 권한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서 그것이 교육부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것을 해소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장공모제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고로 교장공모제 제한 지침을 푸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교장승진제도가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때 승진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로 접근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평가, 교육청에 대한 평가 체제를 잘 살펴서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사 중심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시급하게 폐지되어야 할 것은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평가와 시도교육청 평가다. 그렇다고 평가 자체를 완전히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하향식 평가를 상향식 평가로 바꾸자는 것이다.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개인성과급 체제를 학교만족도와 연결한 학교단위 성과급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교육청 직원의 성과급을 이것과 연동해도 좋을 것이다. 교육부는 그러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감독만 하면 된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청에 대한 상향식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대체하면 된다. 평가를 한다는 것은 힘의 흐름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관료적 평가 체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힘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 체제가 필요하다.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힘을 부여하는 평가 체제를 만드

는 것이 학교 자치, 교육 자치의 열쇠다.

○ 정책 추진의 문제

- 개혁은 필연적으로 반발을 초래한다. 반발을 회피하고자 하면 어떤 의미 있는 개혁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대체로 정치적 결정은 이익집단의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에서 분명한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

- 반발이 예상되는 정책은 고교서열화 해소의 과정에서 자사고, 외고 등의 반발이 있겠고, 교장공모제에 대해 기득권 집단의 반발이 있겠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교사집단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절대평가와 관련해서는 변별력 약화에 대해 상위권 대학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학원휴일휴무제와 심야영업제한 문제는 학원집단의 반발에 대한 고려로 공약 채택조차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여러 사안에 대해 가치 지향적으로 돌파할 철학과 역량이 있을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다.

- 대통령의 의지, 장관의 의지와 더불어 교육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안과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피상적인 여론에 휘둘리거나 이익집단에 의해 좌초되지 않도록 교육시민단체가 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시민단체 간에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칭 교육쟁점해결위원회가 민간에서 작동할 필요가 있다. 소통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1. 1수업 2교사제 논평

문제인 캠프의 기초학력보장제 방향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1수업 2교사제를 골자로 하는 기초학력보장정책 공약이 발표되었다. 기초학력보장이라는 과제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 1수업 2교사제의 타당성은 충분한가?

1수업 2교사제의 효과성은 충분히 검증되었는가? 일부 시도에서 ‘협력교사제’와 같은 형태의 정책이 실행된 바 있다. 그러나 그 효과성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실증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제대로 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학습안정망을 가장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는 핀란드의 경우를 보면 협력교사제와 같은 팀티칭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좋은 학교에는 팀티칭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보편적으로는 특별지원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특별지원교사는 일반교사 중 대학원 수준의 전문적 훈련을 통해 학습부진학생을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중간쯤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특별지원교사를 중심으로 학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적 자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3단계 학습지원시스템이 작동된다. 어떤 학생이 학습의 곤란을 겪고 있으면 이 학생이 특별 지원의 대상인지를 검토하게 된다. 1차적으로는 일반 수업을 통해 충분히 개별적인 지원을 받도록 노력한다. 담임교사와 교과담임교사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2차적으로 집중지원을 실시한다. 그것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특별지원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복지그룹이 담당한다. 학생은 과외적인 지도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3차 단계인 특수교육지원을 받도록 한다.

핵심은 전문성과 권한을 갖춘 교사의 존재다. 이 구조가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교사부터 배치하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을 낳을 수 있다.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는 고비용이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합당하다. 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해야 한다.

1수업 2교사제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추산이 될 것인가? 공약을 보면 1,000명을 배치하는데 62억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범 실시라는 전체를 달고 있는데 만약 전체적으로 적용하자면 얼마나 필요한가? 현재 협력교사제를 시행한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 서울시 교육청의 시범실시의 경우 대체로 1개 학년(초등 2학년) 2개 학급 당 1명을 배치하여 국어, 수학 수업을 위주로 배치하였다.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전국에 약 6천개 초등학교 중에서 1개 학년에만 2개 학급 당 1명을 배치한다고 보면 어림잡아 계산하면 12만 개의 학급 중에 약 2만개 학급이 대상이 되고 1만 명이 배치되어야 한다. 예산으로 보면 10배인 620억 정도가 소요된다. 이 정도면 큰 무리가 따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커버되는 범위가 1개 학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학습부진은 전체 학년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다. 그리고 국어 수학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초등교실에만 배치를 해도 620억의 6배인 3600억 이상이 소요된다. 그렇게 보면 협력교사제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 보조교사의 양보다 전문교사의 질이 중요하다

또 문제는 협력교사는 임시직이라는 사실이다. 학습부진학생을 돕는 것은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야말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보조교사에게 학습부진학생을 맡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보조교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학교 차원에서 전체 학생의 학습부진의 문제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다양한 인적 자원을 결합하여 총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추고 수행하는 능력을 지닌 교사가 없다면 보조교사제는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구조적 체계 없이 보조교사만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될 수 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정책 공약에는 이와 같은 핵심 구조가 빠져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과거 MB정부에서 추진했던 학습보조교사의 양적 투입 정책 이상이 아닐 수 있다.

고로 1수업 2교사제에 앞서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부분은 전문성과 권한을 지닌 교사의 배치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인가? 기존의 교사 중에 지원을 받아 훈련을 해서 재배치하면 된다. 이와 같은 전문교사의 전담 업무를 위해 수업 시수를 10시간 정도 경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간제 교사 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학교 당 0.5명의 교사를 추가로 채용하면 된다. 물론 학습부진학생의 숫자가 많은 학교는 학습지원전문교사의 지휘를 받아 집중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교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 기초학력과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한편 기초학력보장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수포자 문제의 원인은 상당 부분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과정에 있다. 그리고 상대평가 체제 속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할수록 시험문제가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와 같은 큰 원인을 해결하면 상당 부분 수포자 문제는 해결된다.

또 기초학력의 개념부터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현재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설정하는 기초학력 수준은 비현실적이다. 어느 정도의 학력을 목표로 하는지부터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기본학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야 교사의 에너지가 적절하게 배분이 된다.

근본적으로 무엇을 기본적 학력으로 볼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읽기 능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것인지, 수학 능력을 강화할 것인지, 예체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치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한 방향성에 따라 과연 어떤 제도가 그러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적합한지 나오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 교육과정이 현실적인지부터 자세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 법제정이 필요하다

MB정부에서도 초기에는 상당한 보조교사를 투입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예산이 축소되고 지금은 중앙 정부 차원의 예산은 거의 편성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것은 법적 기반이 없이 임시적인 정책과 특별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기본학력보장을 위한 지원체제를 법에 명시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학력보장지원법(박홍근 의원 발의)에 대한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

한 학생도 버리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학생의 기본학력을 책임진다는 것은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 그만큼 이 부분은 현장의 경험에 기초하여 치밀한 토론을 거쳐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수업 2교사제 정책에 대해 치밀한 재고를 촉구한다.

2017.4.19. 좋은교사운동

참고자료2. 수능 절대평가 논평

질 높은 배움을 견인하고 과잉변별을 지양하는 수능이 되어야 한다

2021 수능 체제를 결정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가 되었다. 수능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바칼로레아식 논술형 수능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창의융합교육은 단순히 여러 과목을 통합적으로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 과목이라도 깊이 배우면서 연계된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통합적 사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깊이 배우기 위해서는 내용 요소는 축소되어야 하고,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의미 있는 질문을 가지고 통합적 사고를 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능을 설계할 때 이와 같은 목적을 두고 설계하여야 한다.

현재의 객관식 시험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바칼로레아식 논술형 수능이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의 대학별 논술은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유형이 너무 복잡하거나 다양해서 학교교육으로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일부 학생만 응시하는 유형으로 정상적인 수업에서

교육되지 않는다.

바칼로레아식 논술형 문제는 통합적 사고와 토론과 글쓰기 훈련을 요구함으로 인해 학교교육의 질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현재의 수능은 학교교육의 질적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것이 수능이 개혁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다.

사교육 유발 우려를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 있다. 첫째, 정상적인 교육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하여야 한다. 둘째, 학교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하면 사교육보다 경쟁 우위에 있다. 이는 수업의 방식이 혁신되어야 함을 전제한다. 일제식 강의로는 어렵다. 개인맞춤형 지도를 해야 한다. 논술형 고사는 필연적으로 그 방향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수업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미 공교육에서는 수 년 동안 서술형 논술형 평가와 프로젝트형 수업이 발전해왔다. 교사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현행 시험 체제, 그 정점에 있는 수능의 형태가 문제다.

채점의 곤란성을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 있다. 첫째, 공정성 문제는 이미 공무원 시험 등에서도 논술시험을 시행하는 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으로 해결 가능하다. 바칼로레아는 3명의 교차 채점을 통해 평균치를 낸다. 편차가 크면 재채점을 한다. 채점자의 평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채점된 표준답안지를 무작위로 섞어서 편차를 확인할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둘째, 채점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면 투자 가치가 있다. 교사들을 평가단으로 구성함으로써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논술형 시험에 대해서 등급은 3단계 혹은 5단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등급을 요구하게 되면 객관적 근거에 집착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창의적 사고를 평가하자는 논술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절대평가가 의미 있으려면 1등급의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

최근 수능의 절대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 늘어났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지점이 있다. 수능이 절대평가가 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경쟁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다. 약간의 착시 효과가 있다. 수능의 절대평가로 인해 경쟁의 강도가 완화될 수 있는 학생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확실히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나머지 학생에게는 상대평가와 다를 바가 없다. 한날 한시에 치름으로 인해 상대적 비교가 되고, 2등급 이하 수준의 학생들은 등급을 올리기 위한 경쟁이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2등급에 포함된다고 해서 공부를 덜해도 된다고 생각할 학생은 없기 때문이다. 1등급 수준의 학생들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그 경쟁 강도의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다.

요컨대 절대평가로 인해 경쟁의 강도가 확실하게 완화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려면 1등급의 비율이 의미 있게 늘어나야 한다. 가장 확실한 효과를 지니려면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뉘어지고 합격의 수준이 정상적인 공교육을 받으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너무 급진적이라면 최대한 양보해서 5등급까지 허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현재 5등급으로 운영되는 성취평가제와도 어울린다.

등급제가 아닌 점수제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쟁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 점수제로 해도 기준선을 제대로 설정하면 효과는 마찬가지다. 마치 운전면허시험에서 필기가 70점 이상이면 된다는지 하는 기준선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100점을 받으려고 과잉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점수제의 문제는 99점 받는 학생도 100점을 받기 위해 과잉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점수제이건 등급제이건 상위 1%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체제 속에서는 학생들이 노력하면 할수록 시험문제는 어려워진다. 희망고문과 비슷하다. 저 고지만 올라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힘들게 올라갔더니 더 높은 고지를 가리키며 올라가라고 한다. 마지막 1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되는 험거래임과 같다. 상대평가로 인한 무한경쟁체제를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니 나머지 시간은 소설도 읽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가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절대평가 그리고 등급제를 말하는 이유는 더 이상 과잉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일정한 기준선을 마련해주는 의미가 있고, 그 기준선이 의미가 있으려면 1등급 학생의 비율이 중요하다.

변별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모든 과목에 1등급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약 10%가 나온다면 어떨까? 그 학생들을 다시 세분화하여야 할 것인가? 그 학생들의 교과 지식의 능력은 비슷하다고 간주하여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성적 상위 10% 학생들 가운데서 1% 혹은 0.1%가 되기 위한 경쟁은 다소 무의미한 경쟁이다. 엘빈 토플러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미래에 불필요한 공부에 하루 15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10% 수준 안에 드는 학생은 더 이상 문제풀이에 몰두하기보다는 인문교양과 예체능에 시간을 쏟는 편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유익하다. 사실 10%도 너무 좁게 잡은 것이다. 우리는 합격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교사의 에너지, 학생의 시간, 부모의 사교육비를 불필요한 공부에 과잉 투자하도록 만들고 있다. 한편 상위권 학생을 더 세밀하게 변별하기 위한 체제 속에서 다수의 정상적인 학생들(공교육에 충실한 학생들)이 열등생으로 전락하고 있다. 5등급 정도의 구분이면 족하다. 과목별로 약 20%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는다면 전체적으로 1등급을 받는 학생의 숫자는 그보다 줄어들고 내신을 조합해서 보면 더욱 줄어들 것이다. 소위 상위권 대학의 비율을 10% 정도로 본다면 그 대학들은 성적 상위 10%~20% 정도 되는 학생들 가운데서 더 이상의 세밀한 변별을 요구하지 말고 주어진 정보에 기초하여 선발

하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 과잉 변별에 따른 과잉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추첨도 생각할 수 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더 이상의 과잉 변별을 하기 보다는 추첨으로 하는 것은 과잉 변별에 따른 불필요한 경쟁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도 별 차이가 없음으로 인해 합리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대학체제도 변화될 수 있다. 선발체제의 변화를 통해 결과적으로 상위권 대학 내부의 서열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요컨대 상위권 대학의 과잉 변별 요구에 의해 학생들이 불필요한 과잉 경쟁에 휘둘리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수능의 목적이 무엇인가? 세밀한 변별인가?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과열경쟁의 완화에 둘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 과목의 선택과 비중 문제

수능 과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필수로 할 것인가? 또 다른 선택과목을 추가해야 할 것인가? 과목의 비중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수능은 현재 수학 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2015 교육과정이 목표한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사회와 과학은 기본적 인문 교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통합사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차원에서 공통필수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합사회가 논술형 수능과 연결되어 토론과 글쓰기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현재 학교교육이 국영수 중심의 도구교과로 편중된 현상을 해소하고 미래핵심역량을 기르고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공통 필수로 강조되어야 한다.

수학 교과와 과잉을 해소한다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위한 여력은 충분히 확보될 것이다. 수학교육도 질적으로 개혁되고 내용 요소를 축소하여 깊은 배움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학의 학과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학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규정하여야 한다. 수학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학과에서도 과도한 수준의 수학 점수를 요구하는 것이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맞추어 학교 교육과정이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무학년 학점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다른 선택과목의 추가는 신중해야 한다. 모든 것을 수능으로만 평가하기보다는 수능은 기본적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정도로 역할을 정하고 깊은 배움, 다양한 배움은 평소의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젝트형 수업, 수행평가의 내실화를 통해 깊은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아울러 역사 과목을 현재처럼 독립적으로 수능에서 필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한다. 객관식 문제로 평가하는 것도 문제다. 필요하다면 통합사회의 일부로 논술형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 내신과 학종의 문제

수능과 함께 내신도 상대평가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현재의 상대평가체제는 3년 동안 입시 경쟁을 하는 것이고, 동료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한번 등급을 받으면 끝으로 재도전을 허용하지 않는다.

향후 무학년 학점제를 기초로 절대평가로 운영되고, 재수강의 기회도 부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수강 여부가 표기되어 평가 과정에서 대학별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내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가칭 ‘평가지원센터’에서 무작위 샘플링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질적 관리를 하여야 한다. 만약 과도기적으로 상대평가체제를 유지한다면 9등급(1등급 4%)을 폐지하고 5등급제로 운영하고, 1등급을 20%~30%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10명이 듣는 과목도 2~3명 정도는 1등급을 받을 수 있어 소인수 선택 과목의 편성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과목별 총점 평가제를 탈피하여 세부능력별로 평가함으로써 수행평가를 강화하고 질적 정보를 풍부하게 하여야 한다. ‘친절한 성적표’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대학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더 확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국어 B 등급이나 총점만 있다면 새로운 평가체제에서는 국어 과목 아래 작문 능력, 발표능력, 협업능력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음으로 인해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여 반영할 수 있다.

학종의 경우 제기되는 문제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가 큰데 이는 학교민주주의의 강화와 교직원문화 개선을 통해 개선해가야 한다. 불편부당한 평가나 성적 부정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통로를 마련하고 확인시 엄벌해야 한다. 학종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수능으로 회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비교과 스펙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하고 현재 비교과에서 평가되는 요소들이 교과 수업을 통해 평가될 수 있도록 수업을 혁신해야 한다.

○ 대학별고사의 문제

수능의 변별력을 문제 삼아 대학별고사를 치르겠다는 시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

의 자율권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대전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대교협 체제를 넘어 고교와 대학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교육과정평가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목적은 고등학교 학생에게 기대되는 학력의 절대적인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대학이 필요로 하는 학력이 있다면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한다.

○ 결론

수능과 대입전형은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프로젝트형 수업 등 학교현장에서는 뜻있는 교사들의 다양한 수업 혁신의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학년학점제, 교사별평가, 절대평가 등에 대한 요구들이 분출하고 있고 상당 부분은 대선 공약으로 수렴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들을 제압하는 하나의 거대한 힘이 있으니 그것이 곧 수능이다. 수능은 객관식 시험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휘두르며 수업혁신의 싹을 잘라버리고 만다. 선발을 위해 최적화된 객관식 시험의 한계를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바칼로레아식 논술형 수능이 되어야 한다. 또 지나친 변별을 요구하지 않음으로 인해 과잉 경쟁을 지양하는 수능이 되어야 한다. 국영수 보다는 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하는 수능이 되어야 한다.

2021년 수능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년간 또 이 낡은 수능 체제를 지속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2017.5.22. 좋은교사운동

■ 제3발제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 전략을 탐색한다.

이성대(신안산대학교 교수)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 전략을 탐색한다.

■ 제4발제

초기 교육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과제와 방향

최창의(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

1. 교육 분야 정세 전망

1) 국정기획자문회의의 역할이 막중

- 과거 국정인수위와 성격이 유사한 국정기획자문위 30명 위원 가운데 교육분야는 내부 위원인 국회의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어 그 역할이 매우 막중하고 교육단체들의 일정한 지원과 의견 전달이 적극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새 정부의 교육정책 공약 중 우선 추진 중점 과제 선정과 추진 방식, 교육부, 국가교육사무 인수 인계, 국가교육회의 등 중앙 교육 기관의 기능 재편 등에 관해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가운데 개혁적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2) 교육 실세의 소통 채널과 자질, 능력이 중요

- 새 정부 교육 정책은 현재의 인사 구도와 인적 배치로 볼 때 교육부장관과 교육비서관이 실질적으로 중심을 잡고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 정권의 교육 실세라 할 수 있는 교육부장관과 교육비서관의 교육현장 개혁 세력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혁신 의지에 따라 교육 변화가 좌우될 것이다.

3) 교육부 기능 재편과 교육 공약 실행 로드맵 준비 시급

- 교육부 관료들의 지난 정권에서 반교육적인 교육 정책 양산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없이 정치권에 줄서기, 눈치보기식 자체 개혁안 추진에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

- 교육운동 진영 및 교육주체들의 조직적 대응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으나 정책 발표 시기와 내용에 따라 단위 조직별 이해와 요구가 분출될 것이므로 새 정부의 구체적인 교육 실행 방안이 세밀하게 검토, 보완되어야 한다.

2. 초기 교육 개혁의 우선 과제

1) 새 정부의 교육을 통한 인간상과 미래비전에 대한 철학과 지표 수립

- 새로운 정부가 추구해갈 교육 철학과 가치 속에서 5년의 교육 정책 방향과 내용이 수립되고, 선거 기간 중의 정책 공약도 재검토,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국가교육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내세웠지만 교육의 미래 비전과 인간상에 대한 제시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새 정부 교육공약 우선 순위, 추진 단계와 구체 방안 수립

- 문대통령의 교육 공약은 1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56개 과제 및 108 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단기에 마련된 교육 공약이라는 특성상 현장 전문가들의 재검토를 거쳐 추진 시기, 단계, 구체 방안을 구체화하고, 교육 변화에 절실하거나 현장 요구가 많은 내용도 추가해야 한다.

3) 교육부의 개혁성 담보할 내부 직제 개편안과 적합한 인적 구조 준비

- 안정적인 교육 개혁과 교육부 기능 개편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확실한 직제 구조, 인적 개혁은 필수적이다. 새 정부의 분권과 자치의 지향에 걸맞게 교육부의 구조 개혁 방안, 국가교육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계획이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 교육부는 현장 요구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전면 쇄신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일하는 구조를 수립해야 한다.

4) 장관 취임후 30일, 100일, 6개월 단계별 교육혁신 로드맵 마련

- 국정자문위 활동 기간 중에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협의를 통해 교육부 조직 개편

안을 비롯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장관 취임후 6개월 안에 핵심 공약 및 조직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

5) 2018년도 예산편성 대비, 교사, 학부모 지지 기반 형성할 교육과제 처리

- 예산에 따라 사업 내용이 결정되므로 2018년도 예산에 주요 공약과 조직 개편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확인, 점검해야 한다.
- 초기에 학부모와 교사 학부모 집단의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형성할 수 있는 교육과제를 적극 발굴, 단행하여 이후 교육혁신에 협력자로 신뢰를 구축하도록 한다.

3. 교육개혁 성공을 위한 교육개혁추진단 구성과 역할

1) 필요성

- 교육부 자체 개혁안에 대응하고 선제하기 위한 자체 전략과 구상 마련
- 교육 분야 정세에 대비하고 개혁 우선 과제를 치밀하게 준비
- 교육부장관 및 교육혁신 행정을 지원할 현장 전문가 집단 필요

2) 역할

- 교육개혁의 주요 우선 과제 추진 전략과 구체안 작성 협의
- 교육부 기능 개편, 국가교육위 구성 등 제도화에 관한 법률 검토
- 새 정부의 교육 개혁을 교육현장과 소통하여 구체안 수립

3) 구성

- 교육현장 교원과 전문가 중심의 대책팀 구성
(예/ 정책 예산 공약팀, 조직 개편팀, 법률 검토팀, 국가교육위 준비팀 등)
- 향후 국가교육회의 기구로 통합 전환할 수 있음

4. 국정기획자문위 역점 활동

1) 적폐 교육문제 해결과 담당 교육관료 문책

- 국정교과서, 서명교사 징계, 시도교육감 고발, 자사고 평가 경위와 담당자

2) 교육부 개편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구성과 법률안

- 교육부의 효율적 기구 개편 방안,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원회 효율성
- 3) 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과 2018년도 교육예산 편성에 적극 개입
- 학교현장 과급 예산, 특별교부금 통한 전국 사업 삭감, 공약예산 적극 반영

※ 새 정부 교육 정책에 따른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

<정책면에서>

- ▲교육단체들 성향과 이해에 따른 정책 대결→ 내부형교장 공모제, 전교조 합법화
- ▲특목고, 자사고 학부모등 자녀중심 반발→자사고, 특목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제
- ▲비정규직 노조와 구성원 집단요구→ 비정규직 공무직화, 각종 차별 철폐
- ▲사회체제 개편, 대학서열화 해소없는 교육공약 비현실성→대학입시경쟁 완화책

<조직면에서>

- ▲교육부의 관료성→ 개방직 공모제 없는 교육부 관료제 순환, 정치권 줄서기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 혼재→ 지방분권에 관한 일괄 법률처리 필요
-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분권 혼란→ 권한이양에 따른 제도와 인적 구성 준비 미약
- ▲국가교육회의 위상과 역할 모호→ 성공적인 기구 구성과 운영 사례 취약

참고 사항

구분 **교육 자치 강화**

교육 과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권한 명료화**

□ 실태

- 교육기본법에서는 국가(교육부장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의 공동 주어가 상징하는 것처럼 양자의 사무와 권한의 경계가 모호함
- 초·중등교육법 역시 공동 주어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교육감 고유의 사무와 권한을 말하기 어려울 정도임

- 정부조직법의 경우 변화된 지방교육 정치-행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감에 대한 일방적인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에서도 여전히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이 모호하며 특별히 국가위임사무와 그에 따른 국가(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은 정비가 필요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의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도 기본적으로 구 교육법의 틀을 답습하는 차원에서 제정되었으며, 또 제도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제 때 개정하지 못한 상태임

□ 제안 이유

- 교육기본법 등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 관계 기본법령들이 대부분 그 경계가 모호하게 설정됨으로 인해 교육부장관과 교육청감의 갈등과 분쟁이 심화됨
- 지방교육자치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과거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 간의 권력의 불일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법령 개정 방향

- 국가(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공동주어를 명확화하고 법령에서 정한 권한 이외의 유치·중등 교육에 관한 사무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변경
- 변화된 정치-행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교육부장관의 교육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변경
- 구 교육법 틀에 맞춰진 부분을 개정하여 행정사무 관계 정리

□ 관련 법령 개정(안)

➤ 「교육기본법」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 <u>지방자치단체는</u> 1) 지역의 실정에 맞는 -----.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조(교육재정) ① ----- ----- <u>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충족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u> ----- ② ----- <u>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형평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u> 위하여-----.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제1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u>다만, 법령에서 교육부장관과 학교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것 이외의 모든 유·초·중등 교육에 관한 사무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갖는다.</u>
<신 설>	② <u>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교육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1) 이런 개정 작업에 참고할만한 좋은 사례가 초·중등교육법 제23조다. 즉, “제23조(교육과정 등)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진하게 강조는 연구자)

➤ 「정부조직법」

현 행	개 정 안
제4장 행정각부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중략>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4장 행정각부 제26조(행정각부) ① ----- ----- ----- <중략>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방행정의 장과 분담·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²⁾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 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 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유·초·중등에 관한 사무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2) 이에 대하여 행정법 전공자인 김명연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운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제26조의2(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①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위법·부당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김명연, 2016. 12. 9 본 연구진의 전문가 세미나 발언 요지) 이 조문에 대해서는 김홍주(2016. 12. 9: 97)도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국가사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지방행정의 장을 지도·감독한다.” 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u>기본적인</u>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하략></p>	<p>제11조(〇〇〇) ① 제1조(목적) ----- ----- -----수평적·협력적----- -----, <하략></p>
<p>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u>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u></p>	<p>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u>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u> 1. <u>관할 구역의 자치사무</u> 2. <u>법정수입사무(法定受任事務): 다음 각 목의 사무</u> 가. <u>법령에 의한 법정수입사무: 국가 사무이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가 수입한 사무</u> 나. <u>조례에 의한 법정수입사무: 시·도의 사무이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조례에 따라 관할 시·군 및 자치구가 수입한 사무</u></p>
<p>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u>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 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u>(하략)</p>	<p>제167조(법정수입사무에 대한 감독) ① <u>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법정수입사무에 대한 주무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감독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u> ② <u>법령에 따라 시·도가 처리하는 법정수입사무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는 법정수</u></p>

	<p><u>임사무에 관하여는 1차로 시·도지사가, 2차로 주무부장관이 감독한다.</u>(하략)</p>
<p>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u>법령의 규정</u>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u>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u>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하략></p>	<p>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 -- <u>법령 또는 조례</u>----- ----- <u>법정수입사무</u>----- ----- ----- -----, <하략></p>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현행	개정안
<p>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 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 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p>	<p>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좌동</p>
<p><신설></p>	<p>제2조의2(사무획정의 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도의 사무로 본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령에 규정된 국가 사무 외에 다음 각 호에 관련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1.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 설정에 관한 사</p>

	<p>항</p> <p>2.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기회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p> <p>3.국제법규 준수 및 국제협력에 따른 정부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p> <p>4.그밖의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p> <p>③사무를 둘러싸고 국가와 시·도가 경합하면 시·도의 사무로 본다.</p>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법정수입사무의 처리) 국가행정사무 중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시·도가 수입한 사무는 교육감이 수행한다.
<신 설(제42조의2에서 제42조의7)> ³⁾	뒤에 별도로 제시한 “신·구조문대비표” 참조(표가 커져 따로 제시하였음)

(제42조의2에서 제42조의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2조의2(자료제출)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교육부장관은 서면 요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의3(지도·조언) ① 교육부장관이

3) 동일한 내용을 (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거나 (2)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 (가칭)을 제정하여 별도로 담은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 V 장의 “입법전략” 에서 언급하고 있음)

	<p><u>교육감에 대하여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지도·조언을 하는 경우, 교육감이 지도·조언의 취지와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요구하면 교육부장관은 서면 요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u></p> <p><u>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지도·조언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행·재정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u></p>
<p><u><신 설></u></p>	<p><u>제42조의4(시정명령 관련 협의 요구) ①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교육감은 7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u></p> <p><u>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나 정지의 효력은 협의 종료 시까지 정지된다.</u></p> <p><u>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협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u></p> <p><u>④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 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제2항의 협의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u></p> <p><u>⑤ 교육감이 제4항의 협의를 요구하</u></p>

	<p>지 않은 경우에도, 교육부장관의 자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42조의5(직무이행명령 관련 협의 요구) 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교육감의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이행할 사항을 명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이 제1항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이행 명령의 효력은 협의 종료 시까지 정지된다.</p> <p>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협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협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이 제2항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그 이행명령에 관한 협의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p> <p>⑤ 교육감이 제4항의 협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육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42조의6(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특례)</p>

	<p><u>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68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라 한다)는 제42조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한 인사가 과반수를 이루도록 구성한다.</u></p>
<p><u><신 설></u></p>	<p><u>제42조의7(사무의 분별)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어떤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를 둘러싸고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한다.</u></p> <p><u>② 교육부장관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되며, 교육감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제42조의4제4항 및 제5항과 제42조의5제4항 및 제5항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u></p>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 전략을 탐색한다.

■ 제5발제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 전략을 탐색한다.

곽노현(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 전략을 탐색한다.

■ 제6발제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 추진 전략 방안

한만중(서울시교육청 정책 보좌관)

□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에 대한 평가와 판단, 보완사항

■ 우리 교육의 구조적 적폐인 과도한 입시 경쟁 교육과 학벌 학력 구조 문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 미흡

-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체질을 강화하겠습니다.
-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의 계층 사다리를 복원 하겠습니다.
 - 입학 고용 승진에서의 학력 학벌차별 관행 철폐(고졸과 대졸, 업종 간의 임금 및 사회 경제적 격차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음)

■ 4차 산업 혁명 시대(인공 지능 시대) 등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공교육의 과제와 역할에 대한 천착과 비전 제시가 부족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체제를 만들겠습니다
 - 지식정보기능사회에 맞는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
 - 미래사회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직업교육 강화
 - 전문대학 질 제고
 - K-MOOC를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 적합 단기학위(한국형 Nano-Degree) 운영

□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공약들 간의 상호 연계 관계 정립과 추진 우선순위 제안

■ 고교 학점제 도입과 고교체제 단순화, 일반고와 특성화 고교 중심의 고교체제 개편, 교원 증원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함

■ 대학입시 단순화와 대학체제 개편, 대입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모든대학에 기회균형선발전형 의무화, 기회균형선발을 정원내외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 포지티브 과제(혁신학교,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확대, 고교 무상교육, 고교 학점제 도입 등)을 우선 추진하고 쟁점 과제(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전환, 대학입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계기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주요 정책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 박근혜 정부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교육부에서 제시한 사업 방안을 교육청이 경쟁적으로 주요 사업으로 달성하면서 전면 확대가 이루어짐

■ 고교체제 개편, 대학입시 제도 개혁, 대학 체제 개편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해 공교육 강화와 입시 경쟁 교육과 교육 불평등 구조 완화 등의 기초를 바탕으로 단계적, 상호 연관 관련성을 고려한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

※ 고교 체제 단순화와 고교 학점제 도입,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종합 계획과 부문 별 추진 계획을 결합하여 추진

□ 갈등적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

■ 교육부문의 구조적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사업은 중·장기적인 전망과 사

회적 합의에 기초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야 함(학벌 학력 구조, 사교육과 특권 교육 등)

■ 국가교육회의와 향후 국가교육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교육 거버넌스의 틀로 설정하여 다양한 국민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운영

■ 수학능력고사 절대 평가로 전환과 고교 체제 개편 등 기존의 학력 학벌 구조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교육 기득권 세력(외고, 수도권 상위권 대학과 보수 언론 등)의 물적 토대가 점차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 교육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교육청과 교육부, 의회, 청와대의 상호 협력방안과 역할 분담, 시민사회의 역할 등

■ 교육거버넌스 개편의 구체적 추진 방안과 전략이 제시되어야 함

○ 교육부 기능 개편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 집권 초기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설치

- 장기적으로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논의를 위한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 평생 직업 교육 중심으로 기능 개편

* 교육부 기능 개편의 기준과 원리가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음. 정책 방향 수립과 입안과 기초 제시, 예산과 정원 책정 등의 정책 추진 메카니즘의 범주에서 재정립되어야 함

* 현재 3실 3국 11관 49과(담당관) 총 57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부조직법 제 28조: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 교육- 평생 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관장, 국가교육정책 수립 및 정책 업무 총괄국으로 되어 있는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을 시도교육감협의

회의 강화와 교육청의 권한 이양 등과 연계하여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함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는 역할과 권한의 재정립이 필요함)

■ 제7발제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 전략을 탐색한다.

이 범 (교육 평론가)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 전략을 탐색한다.

■ 제8발제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고찰

- 중고교 교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약을 중심으로 -

이기정(미양고 교사)

1.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

이것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이 대단히 흥미로운 공약이어서가 아니다. 이것은 진보 진영 후보들이 선거 때 단골로 내놓는 아주 익숙하고 낯익은 공약이다. 그런 공약을 여기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이것이 이번엔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 공약을 보수 쪽 대선 주자들이 오히려 더 세게 내세웠다. 자사고·외고 폐지는 유승민 의원의 대표 교육공약이었다. 특목고·자사고 폐지는 남경필 지사의 중요 교육공약이었다. 결국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정당이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찬성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공약은 실행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그 성공이 100% 보장된 정책이다.

첫째, 법의 개정이 필요 없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만 고치면 된다. 설사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도 어렵지 않게 추진할 수 있다.

둘째,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예산 부담이 없다.

셋째, 국민적 합의 수준이 매우 높다.

특목고 중 과학고, 예고, 체고 등은 그것의 존재 이유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하지만 외고와 자사고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한나라당에서 외고를 없애겠다고 잠시나마 분위기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넷째, 일의 과정이 단순하고 성격이 명확해서 교육 관료들이 잘 할 수 있다.

이것은 교육청이 매년 1학년 신입생을 일반계 고등학교와 똑같이 배정하면 되는 일이다. 과정이 단순하다.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 사실상 만 2년이면 완결되는 일이다.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3번째 해에 신입생이 배정되면 일이 완성된다.) 일의 성격이 분명하다. 이루어지는 것과 이루어지지 않는 것 사이에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서류로만 그럴싸하게 꾸민다든지, 형식적으로만 그럴싸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일의 진척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일은 교육 관료들이 상당히 잘한다.

보수정당인 바른정당 후보들까지 강하게 주장했던 것을 새 정부가 실행하지 못한다면..., 정말 기가 찰 일이다.

2. 대학입시 공약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입시 공약을 정리하면 대략 이렇다.

- (1)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종합전형-수능전형 셋으로 단순화.
(논술폐지 공약으로 해석 됨)
- (2) 수시 비중의 단계적 축소
(학생부종합전형의 축소를 해석 됨 - 문재인 후보는 토론 과정에서 아니라고 함)
- (3) 기회균등전형 의무화.
- (4) 수능절대평가

(1) 왜 논술전형 폐지인가?

다른 입시 전형에 비해 이것이 사교육을 제일 크게 유발하기 때문이다. 논술을 폐지하면 사육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논술전형을 폐지함으로써 입시를 조금이나마 단순화할 수 있다.

(2) 왜 학생부종합전형의 축소인가?

첫째, 학생부종합은 입시전형 중 객관성이 제일 부족하다. 즉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물론 객관성과 공정성은 서로 다른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은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그 둘을 비슷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우리사회에는 더 많은 것 같다.

둘째, 학생부종합에 대해 학부모들이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학생부종합은 하나의 전형이지만 그 자체로서 매우 복잡한 입시다. 학생부종합은 입시종합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이름이라 할 정도로 존재하는 모든 입시가 종합적으로 활용되는 입시다. 대학별고사(면접 및 구술고사) + 수능시험 + 교과 성적 + 비교과 스펙 + 자소서 + 추천서 ~ 등이 합쳐진 복잡한 입시다. 이 중 비교과 스펙은 또 여러 개의 활동(독서, 봉사, 수상, 동아리 등등)이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의 축소는 입시의 퇴행을 부를 수도 있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3) 왜 기회균등전형의 의무화인가?

입시불평등을 완화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입시에서의 불평등을 분명하게 완화하려면 할당제적 성격의 전형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기회균등전형은 전형적인 할당제적 성격의 입시다.

사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도 일종의 할당제적 입시다. 그것은 학교할당제 성격의 입시라고 봐야 한다.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인한 입시불평등 완화효과는 그것의 할당제적 성격에서 전적으로 기인하는 것이다. 학종의 열렬한 옹호자들이 그것을 학생부종합의 공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타당치 못하다. 사실 최상위권 대학의 기회균형선발전형은 대부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운영된다. 그렇다고 기회균형선발전형의 장점을 학생부종합의 장점으로 볼 것인가?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가진 장점인 입시불평등 완화효과는 할당제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학생부종합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입시불평등을 뚜렷하게 완화하려면 할당제적 성격의 입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인의 공약은 비중확대라는 표현이 아닌 의무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의무화는 언뜻 용어는 강렬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영양가는 없는 표현이다. 거의 모든 중상위권 대학에서 이미 기회균형선발전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시불평등을 실제로 완화하려면 의무화 조치가 아닌 비중확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왜 비중확대라는 분명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의무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비중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경계했기 때문일까? 그래서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별 것 아닌 말을 사용했을까? 아니면 의무화란 말을 비중확대라는 의미로 사용했을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입시불평등을 뚜렷하게 완화하려면 할당제적 성격의 입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4) 수능 절대평가는 가능할까?

수능 전체를 절대평가제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상당수 대학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그랬듯이 문제가 되는 것은 상위권 대학입시다. 상위권 대학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입시란 결국 줄을 세우는 일이다. 줄을 세워야 합격자와 탈락자를 가릴 수 있다. 입시는 상대평가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냉혹한 상대평가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수능 전부가 절대평가여서 영역마다 1등급 동점자가 수 만명 나오면 어떻게 될까? 줄 세우기가 어려워진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엔 수능을 활용한 학생선발 자체가 곤란해질 것이다. 상위권 대학은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대학별 본고사가 금지된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새 정부가 논술고사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학생부종합전형의 심층면접이 있다. 상위권 대학의 입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세다. 그런데 학생부종합전형은 단일한 입시가 아니다. 교과 내신, 비교과 스펙, 수능 최저등급, 심층면접, 인성면접, 자기소개서 등이 종합된 입시다. 고교 간의 학력격차 때문에 교과 내신을 대안으로 삼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도 상위권 대학은 내신 위주의 입시인 학생부교과전형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 비교과 스펙을 대안으로 삼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그것으로는 줄을 세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현재로서도 역량에 비해 과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자칫 무리하면 학생부종합전형 자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수능 최저등급, 인성면접, 자기소개서 등은 아예 고려 대상이 되지도 못할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심층면접밖에 없다. 상위권 대학은 심층면접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다. 깊은 지식과 사고력을 요하는 심층면접은 지금도 이미 상위권 대학이 선호하는 입시다.

그런데 심층면접은 사교육 유발효과가 매우 크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다면 수능 절대평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3. 중학교 절대평가제 도입

“ 중학교 ~ 절대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 ”

학교 수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국 학교에서처럼 차원 높은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 수많은 조건이 갖춰져야 하겠지만 그 수많은 조건 중, 핵심 중의 핵심은 무엇일까?

교사별평가제와 절대평가제다. 이 둘의 도입 없이 학교수업은 변하지 않는다.

이 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의 내신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혁명적이라 했지만 대단한 것 아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교육선진국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제도에 불과하다.

교육선진국을 보자. 어떻게 고차원적 수업과 평가가 가능할까? 학년이 올라가면 학생에게 폭넓은 선택권이 부여된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과 학습단계를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준다. 교사에게는 온전한 평가권이 있다. 학생의 선택권과 교사의 평가권, 이것 없이 수업의 획기적 발전은 불가능하다.

수업이 발전하려면 결국 학생과 교사가 잘해야 한다. 그 어떤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할지라도 학생과 교사가 잘못하면 수업은 죽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 수 있는가? 학생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줘야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엔 학생의 처지와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줘야

한다.) 그리고 교사에게는 온전한 평가권을 쥐야 한다.

교사의 온전한 평가권이란 무엇인가? 결국 그것은 교사별평가제와 절대평가제이다. 교사에게 온전한 평가권이 주어지면 그것은 곧 교사별평가제와 절대평가제의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것만으로 수업의 획기적 발전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함께 변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이 변해도 이것이 도입되지 않고선 수업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어렵다. 교사별평가제도와 절대평가제도는 수업의 발전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핵심 중의 핵심 제도이다.

중학교는 고등학교에 비해 입시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중학교에서 절대평가를 시행하지 못한다면 고등학교는 더더욱 실행할 수 없다.

4. 학점제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완전히 다른 교실이 열릴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공약이다. 공약에 혁명적이란 말을 붙이려면 이런 공약에나 붙여야 한다. 문재인 후보의 교육공약은 제목이 <문재인인의 교육혁명>이다. 공약을 언뜻 훑어보고 느낀 소감은 ‘교육혁명’이란 말을 붙이기엔 한참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점제를 실제로 실행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교육혁명’이란 말을 붙일 자격이 있다. 나는 문재인인의 21개 교육공약 중에서 학점제가 불러올 변화가 나머지 20개 공약이 불러올 변화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만약 학점제가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공교육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강한 실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일까? 그냥 던져보는 공약은 아닐까?

의심이 간다.

학점제 공약에는 검토라는 단서는 물론 단계적이나 장기적이란 단서도 붙지 않았다. 집권 하면 바로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공약인 중학교의 절대평가 실시에는 ‘단계적’이란 단서가 달려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중학교에서조차 절대평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단계적이란 단서를 단 것에 대해 불만은 있지만 그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중학교 절대평가조차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면서 고등학교 학점제 실시에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고 실시하겠다고? 이게 나로서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게 느껴진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학점제 안에는 절대평가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학점제를 시행하면 절대평가제도 필연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고등학교 절대평가제는 중학교 절대평가제보다 10배 이상 어려운 정책이다. 과장이 아니다. 그 이상이다. 수십 배는 더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학점제 전체는 얼마나 실행이 어렵겠는가? 중학교 절대평가제보다 100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중학교 절대평가에는 단계적이란 단서를 붙여 놓고 고등학교 학점제는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은 것이 나로서는 비논리적으로 생각된다. 학점제 공약, 정말 진지하게 제시한 공약일까? 나로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학점제 공약은 나로서는 매우 반가운 공약이다. 그런데 과연 실행될 수 있을까? 내 판단으론 쉽지 않다. 학점제 공약은 어쩌면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실행이 어려운 공약이란 얘기다.

학점제의 시행은 필연적으로 다른 많은 변화를 부른다. 그 중의 하나가 대학입시다. 알다시피 대학입시는 답이 없다. 학점제에 맞게 대학입시를 설계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가능하긴 하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로 어렵다.

하지만 학점제의 도입 없이 공교육의 획기적 변화는 불가능하다. 학점제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손해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 전략을 탐색한다.

※참고사항 :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교육공약

분류	사교육 경감 국민 추천 16대 공약 관련	문재인 답변서 내용	문재인 공약집 내용	경선 과정 공약 블로그 및 언론 (공약집 중복 내 용 불포함)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서열 화 및	1. 고교 체제 단 순화 및 고교 선 지원 후 추첨 전 면 도입 등	△외고·자사고·국제고 단계적 일 반고 전환(학생 우선 선발권 없애 고 동시 선발, but 선지원 후추첨 언급 없음) △자사고·특목고의 5년 주기 평가 에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 평가 법 제화하고 공교육 영향 평가 강화 △자사고 보조금 심사 강화 등 회 계부정 및 입시부정 엄격히 감독	복잡한 고교체제 단순화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일반고·특목고·자사고 고교 입시 동시 실시	
	2. 수능	△논술, 영어·수학·과학 특기자 전 형 폐지	대학입시 단순화 △학생부 교과전형·학생부 종합전형·수능전형 3가지로 단순화,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	△대학입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취업 차별 을 해소 할 방안	절대평가 혹은 대학입학보장제 등 혁신적인 대입제도 개선 방안	<p>△대입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수능 전형 3가지로 단순화(학생부교과전형은 내신,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수능전형은 수능으로만 선발)</p> <p>△학생부종합전형 비교과영역 축소(소논문, 에세이, 자기소개서 등)</p> <p>△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하고 장기적 수능 자격고사화</p>	<p>지 검토, △학생부의 사교육 유발요소 반영 금지 등 대폭 개선</p> <p>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p> <p>△대학입시 부정·비리 감시 강화, △대학입시·학사비리 연루 대학은 지원 배제·중단, △대학 신입생의 지역별·계층별·학교유형별 입학 현황 정보 공개</p> <p>대입전형 절차 간소화</p> <p>△원스톱 대입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강화, △대학 입학 전형수 축소 및 대입전형 명칭의 표준화</p> <p>학교교육 정상화하도록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p> <p>△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능은 절대평가로 추진. △예측가능한 대학입시가 되도록 대입 법제화 추진</p> <p>대입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p> <p>△기회균형선발전형 의무화, △기회균형선발을 전형내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 확대</p>	<p>(17-03-22 교육공약 발표)</p> <p>△모든 대학 기회균등전형 의무화(17-03-22 교육공약 발표)</p> <p>△중소기업 근무한 경우 진학 기회 확대 (17-03-22 교육공약 발표)</p>
	2-1. 대학 서열화 해소 및 완화 대책	<p>△3단계에 걸친 지역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 및 대학 연합 방안 (1단계: 지역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2단계: 국립대 연합체계 구축 및 공영형 사립대 육성→3단계: 국립대 연합체계-사립대 중장기적 연합 추진)</p>	<p>거점국립대가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p> <p>△국립대학간 선택 집중을 통해 대학들이 주력 학문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자율적 혁신방안 추진에 대해 지원</p> <p>△거점 국립대의 교육비 지원 확대</p> <p>지방 소규모 강소 대학 육성 지원</p> <p>△교육·직업 중심 특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p> <p>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p> <p>중장기적으로 한국형 네트워크대학 구축을 통해 대학서열화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p> <p>△국공립대 공동운영체제를 통해 대학들의 자발적 고등교육 혁신체제 방안 구축</p> <p>△국공립대간 기능별(연구중심·교육중심·직업중심 등), 중점 분야별 특화 추진,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 이후 혁신강소대학 네트워크 구축</p>	
	3. 질	<p>△대학구조개혁 평가기준을 교육</p>	<p>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및 대학 자율성 확대</p>	

<p>높은 대학 교육 혁신 방안</p>	<p>비환원율, 사회기여도, 거버넌스 등으로 변경 △재정지원사업 지양, 대학 경상비 지원하여 반값등록금 실현 △고등교육평가원 설치</p>	<p>△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이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담은 계획을 토대로 협약을 통해 지원하고 협약 이행 실적위주의 평가 실시</p>	
<p>4. 입시와 취업, 승진 등에서 출신 학교(학력, 학벌)로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폐단을 해소하는 대책</p>	<p>△입시와 취업 등의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단기적으로는 블라인드 테스트 도입</p>	<p>입시, 고용, 승진에서의 학력·학벌차별 관행 철폐 기업의 블라인드 인제 채용을 확대 로스쿨제도 공정성 강화 △로스쿨 입시를 100% 블라인드테스트로 개선, △지방인제 및 계층선발 비율 확대</p>	<p>△표준이력서 도입 (17-04-06 목포 대학생 만남)</p>
<p>5. 고졸자·지방대출신자 등</p>	<p>△지방대 30% 이상 채용 할당준수 법률적 강제 △공정기업 인증제 도입 해 모범 사례 알리고 세</p>	<p>先교육훈련경험인정제 추진 △특성화고 졸업생의 대학진학시 선교육훈련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교육·훈련 비용은 줄이고 전문대 조기 졸업 기회 제공 △학교내, 학교밖의 교육 훈련을 학점과 자격으로 전환 △고등학교-대학간, 대학간, 대학-산업체간 활용</p>	<p>△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17-01-18대한민국바로세우기4</p>

<p>의 취업 과 승진 등에서 차별을 적극적 으로 보 정하는 대책</p>	<p>제 우대 조치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고졸학생 취업보장제 도 추진(일반고 포함) △공/사기업의 고졸 적합 직무 발굴하고 인센티브 부여 △공공기관 고졸 채용할 당제 검토 추진</p>	<p>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공공기관·공기업 고졸 적합 직무 발굴해 우선 채용, △민간기업의 고졸 적합 직무 발굴 및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특성화고 졸업생의 군입대시 특기병으로 갈 수 있는 조치 마련, △고졸기능기술인재 국비유학생 및 글로벌 인턴 확대, △고졸자 선취업후진학 확대 대입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저소득층과 지방 고졸생에게 지방대 의대·한의대·치대·약대 의무 할당제 실시 및 장학금 확 대</p>	<p>차 포럼)</p>
<p>6.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유발하 는 직업 간 임금 차별 획 기적 완 화 대책</p>	<p>△중소기업의 기업장려 지원금 확대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최저임금 2020년까지 1 만원 인상</p>	<p>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위한 로드맵 마련 △기간제·파견 및 하도급, 특수형태고용 등 비정규직 규모 감소를 위 한 로드맵 마련 및 제시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공공부문 상시적 업무 판단기준을 완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범위 및 간접고용 포함 대상 확대)으로, 비정규직 축소의 모범 창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 △공공부문에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 민간부문에 ‘비정규직 비 중에 따른 조달 사업 참여제한제’ 등 고용형태에 따른 연계 인센티브 제 확대해 비정규직 감축 유도 △고용형태공시제(민간대기업 대상)에 비정규직 사용목적 및 주요 업</p>	

			<p>무 공시 의무화</p> <p>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 를 도입</p> <p>△상시·지속적 업무 및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만 직접 고용하고, 출산·휴직 결원 등 예외적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으로 비정규직 진입 입구를 규율</p> <p>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p> <p>사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p> <p>△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 을 월 최대 100만원(연 1200만원)까지 확대(현행 월 60만원)</p> <p>△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대기업에게 ‘비정규직고용 상한 비율 제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 을 부과. 이를 재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지원금 및 사회보험료지원 제도” 를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p> <p>「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적극적 해소</p> <p>△ “비정규직 차별해소 실행위원회” 구성하여 이행여부 점검 및 제도 개선 등 추진</p> <p>△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p>	
--	--	--	---	--

			<p>칙' 을 적용하고 세부적 적용기준 마련하여, 임금·근로시간·성과급·퇴직금·사회보험·복지제도·경력인정 등 차별해소</p> <p>△현행 두루누리지원사업(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 국민연금·고용 보험의 50%지원)에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 지원</p> <p>△1년 미만 근속자(비정규직 포함)에게도 퇴직급여 보장</p> <p>공정임금제 도입으로 만연되어 있는 임금차별 해소</p> <p>△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대졸-고졸 간의 지나친 임금격차(중소기업 61.4%, 비정규직 53.5%)를 80%수준으로 축소</p>	
--	--	--	--	--

			<p>※ 공정임금제 도입 3단계 계획</p> <p>① 기업내 공정임금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임금법」 제정하고 사용자의 차별개선 조치 의무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격차현황보고' 및 '상벌·고용형태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의무 - CEO의 과도한 보너스 또는 퇴직금 지급 제한 · 모든 일자리 영역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판단기준 구체화 등 확대·재조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임금 및 처우 연계해 판단기준으로 활용 <p>② 원·하청관계 공장임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조세지원 확대 -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감면 · 공공부문부터 적정임금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종별 적정임금 정하고, "인건비 빼먹기" 없이 발주 시 임금 실지급 · 민간부분에 "하도급 임금분리 명시제" 도입 · "중소기업 연합 근로복지기금"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기금사업 지원 근로복지공단의 운영지원 <p>③ 전산업 공장임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노사정대화를 구축 · 산업별 표준임금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가치노동 수행하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	--	--	--	--

			<p>최저임금 시급 1만원 △현행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등을 포함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상습·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p> <p>“일자리 최소기준” (최저임금·사회보험·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심판권 부여해 임금체불사건에 대한 전문적 판정 이루어지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은 법률위반에 대한 수사업무에 집중하도록 업무조정 △체불임금 등 근기법을 포함하여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16개 노동 관계법의 이행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추가 증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노동관계법 합동수사 TF를 운영</p> <p>추가 고용지원 제도 신설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채용직원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 (3년 동안 연 5만명에 대해 연 2천만원 한도 지원)</p>	
--	--	--	---	--

			<p>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지원 확대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서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감면 △기업성장 후 주식 또는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 공유제 도입 △소규모사업과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p> <p>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 처우 적용</p>	
<p>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 방안</p>	<p>7. 심야 학원 학습이나 일요일 영업 등 학생 생활을 위협하는 학원 영업 시간 제한 방안</p>	<p>△초등에만 학원휴일휴무제 도입 △심야교습제한 시도별로 학교급별 적정시간 권고</p>	<p>언급 없음</p>	

	<p>8. 나쁜 사교육의 대표 상품인 ‘사교육 기관의 선행 교육 상품’을 규제 방안</p>	<p>특별한 대책 없음</p>	<p>언급 없음</p>	
	<p>9. 한글/영어 조기교육 및 영유아의 과도한 학원 사교육 부담 문제 해결 방안</p>	<p>△아동인권법 제정해 영유아기 과도한 사교육 규제</p>	<p>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한 놀 권리, 평생 습관이 되어야 할 독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생 놀이와 독서 시간 보장 추진,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p>	
<p>학교</p>	<p>10.국공</p>	<p>△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로 확대</p>	<p>△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전체의 30%까지 확충</p>	

교육 격 정 없 는 세 상 을 위 한 방 안	립 유치원, 어린이집 70% 확대	△일부 사립유치원 공영형 유치원 전환	△공공형 사립유치원 확대	
	11. 자격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선진국형 교장 공모제 확대	△확대	교장공모제 확대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교장 공모제 확대	
	12. 창의적 인재 양성 위한 초·중·고의 5지선다 객관식 평가 및 상대	△중학교 일제식 평가 폐지 △고등학교 교사별 평가 도입(절대평가 검토)	△초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중학교 교사별 평가·절대평가,	

평가 등급 제도 극복 방안			
13. 현행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전체와 고교로 확대하는 방안	<p>△프로그램 다양화, 체험플랫폼 구축 등 자유학기제 내실화</p> <p>△자유학년제로 확대</p>	<p>자유학기제 확대</p> <p>△초중학교 일제교사 폐지, 중학교 교사별 평가·절대평가, △현행 한 학기의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자유학기제 확대, △자유학기제 기간중 진로탐색과 부족한 학습 보충 지원, △빅데이터·AI를 이용한 진로 찾기와 진로 프로그램 코칭, △중고 휴학제 허용</p>	
14. 수포자, 영포자 등 수학 영어 학습 격차 해소 위한 방안	<p>△교육과정 대강화·적정화</p> <p>△초중 보조교사 배치로 1수업 2교사제 실시</p> <p>△기초학력보장법 제정</p>	<p>[15. 학습 부진 학생 책임교육 카테고리와 공통]</p> <p>한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초등학교에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추진</p> <p>△아이들의 기초학력을 꼼꼼히 챙겨 공교육 책임과 만족도 향상, △수업 이해를 못해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기초학습력 제고, △학부모-교사-학생의 면담 의무화, 개인별 학습계획 수립, △학교에 학습지원전문교사 배치 및 학습코칭팀 구성</p> <p>1수업 2교사제</p> <p>△학생간 학력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교과목 수업에 2명의 교사 배치, △사범대 등에서 교직 이수 과정 중에 있는 예비교사 인력 활용, △초중고 교사 확대</p>	
15. 교	△고교학점제, 학제 유연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초중고 예체능 교육 대입 반영유도

<p>육 과정 간소화, 초등 돌 봄 교실 내실화, 문예체 교육 강 화, 학 습부진 학생 책 입 교육 등</p>	<p>화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 화 △초등 돌봄교실을 6학년 까지 전면 확대하고 마을 공동체 차원의 돌봄으로 확대</p>	<p>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해 초중고 필수 교과목 최소화, 선택과목 확대 △교과목 수 축소, △교육과정 난이도 및 분량 적정화, △미래핵심역량 중심의 교수방법과 교육평가 혁신을 위한 학교 교사 연수 전폭적 지원 진로 적성 맞춤형 고교학점제(DIY형 교육) 추진 △고교 필수교과 최소화하고 학생 교과 선택권 부여, △학생이 원하는 강좌 신청해 학점제로 운영, △고교학점제 도입시 진로설계 코칭 강화, △고교학점제는 유형별·단계별로 확대(학교 내 개인맞춤형 선택 교육 과정→학교간 연합 교육과정→지역사회연계형 교육과정→온라인 기반 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를 통해 벽없는 학교 추진 △일반고-특성화고-대안학교 간 학점 연계로 학교간 이동 허용, △특 성화고 전공인증제 도입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 스’ 확대 및 내실화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돌봄교실 확대 온종일마을학교 도입해 초등학생 완전책임돌봄체계 구축 △학교 안 마을학교와 학교 밖 마을학교 구축,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마을학교장을 임명하고 학교 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 △꿈을 키우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p>
---	---	---

			<p>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학생에 대해 의무조사 실시 초중고 문예체 교육을 학과 공부 이상으로 확대 △초중고 교과 수업을 예술활동과 결합하기 위한 지원 확대, △지역사회의 시설과 인력풀을 활용하여 학교의 문예체 교육 강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307) △유아 창의놀이교육 확대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핀란드 아난딸로)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지역문화자원과 연계 교육 강화 △지역 예술단체 및 문화시설의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대 △50+ 세대 위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가칭) 운영</p>	
	16. 국가교육위원회 등 독립적·장기적 교육 정책 수립 및 실행 방안	<p>△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설치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추진</p>	<p>교육부 기능 개편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집권 초기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설치, △장기적으로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논의를 위한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 재편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교육 정책 이력제 추진 학교운영위 내실화 교육정책 추진시 교사, 학교현장, 시도교육청과 소통·협력을 통해 정책 파트너십 강화</p>	
	17. (기	△ ‘부모교육’ 학교 실	<p>교사 전문성 신장</p>	<p>미래 사회에 부합하도록 교원양성과정 혁신</p>

		<p>시 △교사재교육시스템과 교사양성시스템 개선</p>	<p>생애수요자 맞춤형 교육비 지원</p>	<p>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여건 개선 교사의 수업기획력·수업 집중을 위해 교사 행정업무 부담 경감 학교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증원 (기간제 교사, 임고준비생에게 교직 기회 확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p>	
	<p>타)</p>			<p>입기 내 전부부담 공교육비 OECD평균 수준 확대 및 유아부터 고교까지 국가책임교육 강 화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고등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교무상교 육 실현 대학 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 △대학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추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성인 비문해자, 의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무 상교육기회 제공 △초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기관 확대</p>	

				<p>△국가근로장학생, 평생교육 강사 등을 교사로 활용</p> <p>100세 시대 성인학습자를 위한 무료 K-MOOC 강의 제공 및 학점 취득 기회 제공</p>	
			<p>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p>	<p>40년된 노후학교 시설 개선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p> <p>학교교육시설 안전 인증제 도입</p> <p>분필 칠판, 노후 책걸상 및 화장실 개선</p> <p>썸통 냉골 교실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학교 전기요금 완화)</p> <p>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화상경마·화상경륜·화상경정 등 도박시설 진입 금지</p>	
			<p>유아기 출발선의 평등 실현</p>	<p>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p> <p>저소득층 유아 교육기회 확대로 유아기 출발선의 불평등 완화</p> <p>△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p> <p>△저소득층계층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이용 확대</p> <p>△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등 질의 균등화를 통해 유아교</p>	

			<p>육 만족도 제고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도입</p>	
		고졸희망시대	<p>특성화고 학점 및 운영 유연화 △특성화고 3년 재학연한 폐지 및 학점제 도입→학교안과 학교밖의 교육·훈련을 학점으로 인정 △전문숙련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해 특성화·전문대의 연계 강화 △특성화고 학점제를 통해 일반고 학생들도 특성화고 전학 용이하도록 유연화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 △전공 적합성이 높은 산업체 현장 실습 실시 △산업체 실습 현장 관리 강화 △노동 인권 교육 강화</p>	
		4차 산업 혁명 대비	<p>지식정보지능사회에 맞는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 △SW 교육 확대 △STEAM(창의·융합교육) 강화, △향후 5년 동안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인력</p>	<p>△초등학교 때 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17-02-01대한민국 바로세우기5</p>

				<p>1만명 확보</p> <p>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직업교육 강화 △국가차원의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수립</p> <p>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확대 △정부주도의 기획, 교육과 산학협력, 재정지원 확대 △특성화고 실정에 맞게 상담·진료교사, 교과·실습 지원 교사 추가 배치</p> <p>전문대학 질 제고 △전문대학 지원 확대 △국공립전문대학 및 공영형 전문대 육성</p> <p>K-MOOC를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 적합 단기 학위 운영 △인공지능, 빅데이터, SW 등 4차산업분야를 우선으로 핵심 강좌들을 묶어 교육과정을 개발 △6개월-1년의 단기간에 특정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이수한 후 단기 학위 발급</p>	<p>차 포럼)</p>
			<p>교육 계층사다리 복원</p>	<p>특수교육대상자 지원 확대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급)신·증설 확대 △특수교사 법정 정원 단계적 확보 △통합교육지원교사 배치</p> <p>탈북학생, 다문화학생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p>	

				<p>런, 금지되는 폭행(제8조) 행위유형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등 포함 △3개월 계속 근로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계약 포함, 근무기간 90일 이상으로 지급대상 완화).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p>	
			<p>국정역사교과서 폐지 및 교육 민주주의 회복</p>	<p>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교육과정개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국·검·인정 결정의 교육민주성 보장 헌법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입시와 관련 없는 과목부터 점진적으로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있어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권 보장 사학비리 근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조정</p>	

				<p>△비리당사자 복귀 금지 및 입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p> <p>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정착 초중등교육에서 민주 시민교육 확대</p>	
		18세 선거연령 인하 등 국민의 참정권 확대		<p>18세로 선거연령 인하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공무원, 교사 등을 포함하여 원하는 국민이면 모두 참여하여 정당의 공직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국민경선제도 도입</p>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		<p>공무원과 교사의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학교,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한 자율적인 민주시민교육 확대</p>	
		열린정부, 서비스 행정		<p>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단체 참여하는 ‘국민중심의 경영평가’</p>	
		청년 일자리		<p>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이고 적용범위 민간대기업에 확산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대기업에</p>	

				<p>규모에 따른 차등(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적용</p> <p>△청년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 기관 또는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및 미준수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p> <p>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안전망(Youth Guarantee)” 도입</p> <p>△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들(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경우, 구직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준의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p> <p>△‘청년내일찾기 패키지’ 확대 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합운영 방식으로 최초의 등록과 상담부터 전략수립, 직업훈련, 경과형 일자리 제공, 취업알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p> <p>기술형 청년 창업 자금지원 확대 및 육성 기반 확충</p> <p>△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과 청년전용창업자금 확대 지원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청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p>	
--	--	--	--	--	--

			<p>성화 지원 △성실실패 재도전 창업자에 대한 재기교육, 재창업 자금 및 펀드 확대 △청년 창업시 일정기간 4대 보험료 지원 △청년 벤처창업·기술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등 판로지원 확대 △창업자·중소기업·벤처기업에게 공공특허의 무상 제공 또는 미활용·휴면 특허의 연계 강화 지원</p> <p>인터넷 창업 및 스타트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데이터요금 인하</p> <p>40세 미만 청년귀농지원제 도입(청년귀농직불제)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 지원</p>	
		출산 친화적 환경	<p>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p> <p>△자녀 양육·교육 비용 부담을 줄이겠습니다.</p> <p>- 아동수당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p>(2018년 출생아부터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 지급. 소득하위 80% 가구 만 5세 이하 아동 대상 시행.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p>	

				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 안심보육 환경 조성 ·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에게 개개인에 맞는 새로운 교육 기회 제공, 학교밖 청소년에게 학교교육 경비에 준하여 홈스쿨링, 대안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기능 보강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지원 확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내실화 △만 9~18세 이하 위기청소년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2%이하(생계비, 의료비 지원은 중위소득 60%미만) 대상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지원 등(월 10만원~연350만	

				<p>원)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내실화</p> <p>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p> <p>△「청소년복지지원법」상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변경, 인권 보호 및 지원 확대</p> <p>△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확대, 기능 다양화, 의료급여 지급 등 지원 확대</p> <p>△자살위험, 보호관찰 등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동반자(찾아가는 전문상담가) 프로그램 확대</p> <p>청소년 근로보호 현장도우미 지원 사업 전국 확대</p> <p>지자체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배치</p> <p>△수련시설에 대한 충실한 지도·감독 및 청소년정책 업무 내실화</p> <p>요보호아동 지원 확대</p>	
--	--	--	--	--	--

				△탈시설 아동의 소득, 주거, 교육 지원 확대 추진	
			아동학대 근절	<p>아동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지역 사회 협력체계 구축</p> <p>△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 등 30여 직종 종사자들의 학대 (의심)사례 파악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원 강화</p> <p>△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다니는 아이들이 3일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시설장이 경찰서에 통보하면 경찰서에서 가정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제도화</p> <p>학대사건 신속 개입 및 피해아동 보호·치료를 위한 인프라·인력 확충</p> <p>△아동학대 개입 전담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폭 확충</p> <p>△피해아동이 충분한 기간 동안 보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대피해 아동 쉼터 확충.</p> <p>△학대 현장 출동 전담 경찰관 배치</p>	
			생활문화 시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p>△유아 창의놀이교육 확대</p> <p>△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핀란드 아난탈로)</p> <p>△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지역문화자원과 연계 교육 강화</p> <p>△지역 예술단체 및 문화시설의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대</p> <p>△50+ 세대 위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가칭) 운영</p>	
		친환경 학교급식	<p>친환경 학교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p> <p>△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노인회관 등 아이들과 어르신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와 정부 및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에 공공급식 확대 및 급식공공조달에 친환경·로컬푸드·유기농공급 확대</p>	
			<p>어린이 안전사고 최소화</p> <p>전 교사의 안전교육 이수로 안전교사화</p> <p>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 안전교육’ 확대</p> <p>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 확충 및 단속 법</p>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 전략을 탐색한다.

				규 강화 추진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 사고나 범죄예방을 위해 CCTV 확대	
--	--	--	--	--	--



우리 세대가 남겨야 할 유산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공공대표 송인수 | 서울시 용인구 한양대로 62길 23 유진빌딩 4층 02-751-4344 nokony@nokony.kr www.nokony.kr